

비상대책위 특보

제 153호

2012년 9월 11일 (화)

“방문진 일정 추가 지연되면 파업 재개”

비리사장 김재철 퇴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회가 오는 20일까지 회사 측 업무보고를 받고 27일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방문진은 이 자리에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남용의혹과 무용가 1위 및 그 친오빠에 대한 수십억 원 대 특혜지출 의혹, MBC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전면사찰 의혹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는 방문진의 청문회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김재철 사장의 비리의혹이 처음 터진 것은 지난 2월 말이다. 그동안 방문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충분하였지만 직무유기를 하며 6개월 이상 허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라도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27일 청문이 김재철 처리 마지막 절차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방문진 이사들은 김재철이 공영방송의 CEO로서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일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온갖 트집을 잡아 방문진 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방문진이 이들의 꿈수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방문진 구성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며 전체적인 일정이 이미 많이 지연되었다. 게다가 사측에서 한 달 전에 통보된 업무보고 일정을 두 번으로 나누어 늦추면서 또 다시 그 일정이 지연되었다. 방문진이 MBC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 측의 지연전술인 것이다.

MBC 죽이기에 골몰하는 김재철 일당

김재철 일당은 한편으로는 방문진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인사와 교육발령 등을 통해 공영방송 MBC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사내에서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들을 골라내 교육발령과 보복인사를 자행하고, 권력에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으며,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전면적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있다.

더 이상 지연은 김재철과 공범 되는 일

우리는 방문진에 경고한다. 방문진이 사측과 일부 청와대 추천 여론 이사들의 꿈수에 휘말려 일정을 더 지연시킬 경우, 우리는 현 방문진 이 김재철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오는 12월 대선에 앞서 MBC에서 양심적인 언론인을 축출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김재철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여야 합의 파기는 파국” 명심해야

그리고 이는 “8월 새 방문진이 구성되면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김재철 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6월 여야 합의를 깨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곧 파국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여야는 물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도 지난 7월 잠정 중단했던 총파업을 전면 재개하기로 오늘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을 밝힌다.

2012년 9월 10일

전국언론노동 문화방송 본부 서울지부 대의원 일동

MBC 정상화를 위한 투쟁 결의안 가결

서울지부 대의원회 만장일치 의결

월요일인 어제(10일) 오전, MBC 노동조합 서울지부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예정됐던 연차휴가 투쟁이 지난 주말 전격 연기된 후 소집한 임시대의원회 인자라 사내외의 이목이 집중됐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현재 MBC를 둘러싼 상황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9월 27일 노조위원장과 김재철 사장을 청문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조합은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영하 위원장은 “김재철의 업무보고 후 열리는 청문회가 김재철 비리 진상파악과 김재철 해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고, 이때까지 전 조합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감청, 교육발령 폭거에 강력 투쟁

이와 더불어 조합은 김재철 일당이 저지른 불법감청 및 교육발령 등의 만행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우선 ‘트로얀 컷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모든 사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해 김재철 일당에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지난 9월 6일 김재철, 안광한, 임진택, 조규승, 이진숙, 차재실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보고가 끝난 후 대의원회에 참석한 54명의 대의원들은 조합이 상정한 『김재철 퇴진 등 MBC 정상화를 위한 투쟁 결의안』을 의결했고, MBC 노동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철, 회계부 조합원 3명에 1년 명령 휴직 폭거

심증만으로 해고나 다름없는 악랄한 화풀이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합에 유출한 당사자인 심증만으로 여섯 달 넘게 김재철 측의 ‘색출 조사’에 시달려온 회계부 소속 조합원 3명에게 김재철이 또다시 1년간의 명령 휴직을 내리는 아만적 폭거를 단행했다. 명령휴직은 취업규칙 37조에 따라 대기 발령을 받은 직원이 대기 기간 만료 때까지 대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들 3명을 검찰에 고소한 김재철 측은 취업규칙 65조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명령 휴직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명중에 법인카드 유출자가 있을 거란 심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해놓은 뒤 징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명령 휴직에까지 처한 치졸하면서도 야비하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명령 휴직기간에는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김재철 측의 심증만으로 갖가지 조사에 시달려온 이들 회계부 소속 조합원 3명은 해고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됐다.

심증만으로 명령휴직, 악랄한 보복

조합은 사실상 이들 3명을 지목해 관계기관에 보복성 수사를 청부해온 김재철 측이 명령 휴직이란 폭거를 자행한 일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로지 파업 조합원이란 이유 외에 심증을 뒷받침할 그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대기발령과 수사기관 고소에, 명령 휴직까지 내린 폭거는 참으로 야만적인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은 이들 회계부 조합원의 집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여섯 번이나 기각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김재철 측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명령 휴직 폭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조합은 이들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임진택 감사 또 인사위원회 참석 일권

어제 이들 조합원 3명에 대한 명령 휴직을 결정한 인사위원회에 임진택 감사가 또다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총파업특보 130호>에서 보도한 대로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징계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감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인사위원회에 감사가 참가해 징계 등을 논의한다면 사규위반에 해당돼 인사위 결정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임진택 감사는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영터리 부실 감사를 진행했을 뿐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특히 어제 인사위원회는 이들 3명의 회계부 조합원 외에 <금요와이드> 불방 사태와 관련해 PD 3명에 대한 징계도 논의됐다. 조합은 임진택 감사의 인사위 출석이 부당한 월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를 계속 용인하고 있는 인사위원장인 안광한 부사장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김재철 일당, 메신저·일기·이메일 모두 훔쳐갔다! 명백한 불법감청 증거 조합에 쇄도

조합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재철 측의 불법감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컴퓨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사찰 당한 MBC 직원과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조합으로 속속 전달되고 있다.

외부 민간인까지 불법감청

사측은 MBC 직원은 물론 민간인까지 불법적으로 감청했다. 사측은 프로그램(Trojan)을 통해 외부 민간인들과의 메신저 대화까지 고소란히 훔쳤다. 메신저 대화내용을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감시한 것은 MBC 직원은 물론, 대화에 참여한 외부 민간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실제 한 조합원의 여자친구가 <데이트온>을 통해 다른 대화는 고소란히 회사 서버에 전송됐다. <MSN 메신저>를 통한 대화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감청됐다.

휴대폰과 연동되는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 역시 불법 감청된 것으로 확인돼 외부민간인의 휴대폰까지도 회사의 감시망에 놓여있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G메일, 일기까지 들여다 본 악랄함

김재철측의 불법감청 증거는 또 있다. 정부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한때 사이버 망명지로 유명했던 구글의 G메일까지도 감시된 것이다. G메일을 보내던 메일의 본문 내용은 물론, 첨부한 파일까지도 회사 서버에 전송됐다. 이메일 감시는 메일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다음의 한메일 역시 감시 대상이었다. 사측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작성, 열람할 수 있는 보안메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감청해 상상 이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사측은 가장 사적인 영역인 일기까지도 회사 서버로 빼냈다. 강지용 사무처장은 파업 이후 짬날 때마다 '파업 일지'라는 제목의 일기를 작성해왔다. 그런데 회사가 설치한 트로이커의 로그기록에 의하면 강지용 사무처장이 쓴 '파업일지(강지용사무처장).hwp' 파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사 서버에 자동 전송됐다. 전송은 10여초 단위로 계속됐다. 참으로 천안공로할 김재철 일당의 무차별 불법 감청과 사찰의 실상이다.

“사찰 프로그램 설치, 보고 받았지만 결정은 안 했다”

이진숙의 황당한 변명, <뉴스타파>에 공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떠올리게 하는 명언이 탄생했다. (<프로그램 설치> 보고는 받았으나 결정은 안했다.”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말이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뉴스타파 25회>에서 제작진은 “정보수집 프로그램이 임원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됐느냐?”고 이진숙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임원들이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트로이커 설치에 대한 최종판단은 누가했다는 것인가? 이진숙은 이에 대해 “실무국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책임은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국인 정보콘텐츠실에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김재철, 안광한, 임진택, 조규승, 이진숙 등 5명의 임원과 정보콘텐츠실장 차체실을 고소했다. 그런데 “보고는 받았으나 결정은 안했다”는 이번 이진숙의 발언으로 김재철측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김재철과 임원들은 차체실 정보콘텐츠 실장이 홀로 모든 것을 짚어주고 감방에 들어가기 바라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차체실 정보콘텐츠실장은 <뉴스타파>에서 “회사 일을 제가 한 것”이라고 말할 뿐 프로그램 설치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 하반기 언론독립 투쟁선포

어제(9월 10일) 오후 전국언론노조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 낙하산 사각 퇴출’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추석 전까지 여당이 ‘김재철·이길영·배석규 퇴진’과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 지침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지금 언론의 현실이 어떤지 둘러보라며, MBC와 KBS의 사례를 들었다. MBC의 경우 이명박 및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능한 PD와 기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났고, KBS에서는 ‘5공 땀뉴스’에 앞장섰고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길영이 이사장을 차지했다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이 완성된 형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MBC를 필두

로 한 언론장악 사태를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박의 언론장악을 묵인하고 편승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이제 언론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MBC구성원들이 2012년 상반기에 언론자유 쟁취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현업에 복귀한 자가 50일 이 지났지만 김재철 퇴진은 지지부진하며 김재철 일당은 대선을 앞두고 PD와 기자들이 공정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에서 결사 항전하겠다고 결의했다. 정영하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의 언론장악을 세습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평가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MBC정 상황을 위해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MBC 자율경영 말살책동을 강력 규탄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는 정영하 위원장과 정대균 수석 부위원장, 지역사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10일) 낮 본사 정문 앞에서 지역 MBC 자율말살 책동 김재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재철 측이 지역 MBC의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대표 이사 단독에서 이사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일제히 추진하면서 지역사의 자율 경영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김재철 측은 현행 주주 소집 조항에 “대표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주총회 안건, 일시, 장소에 한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지역 12개사(부산, 대

구, 광주, 춘천, 청주, 충주, 울산, 강릉, 삼척, 여수, 안동)의 이사회에 1명을 추가해 이사수를 4명으로 늘리고 현행 정관에 ‘이사회 구성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 이사가 반대할 허더라도 ‘과반의 이사회 소집 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재철 측이 이 정관 개정으로 이사에 추가 선임하려는 인물이 MBC 구성원의 94%가 공정방송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 백종문 MBC 편성제작본부장이어서 반발이 더욱 거세다.

정영하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김재철 사장이 황제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없다. 중앙에서 시키는 것도 모자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재철 측의 정관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지역 MBC 사장은 명색이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식물사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번 정관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보복 교육명령 주도 심원택 즉각 교체해야

2580 기자들 항의성명, 사태 확산



심원택 시사제작 2부장의 폭언 욕설에 항의하는 소속

기자들의 의사를 대변했던 고현승, 김희용 두 기자가 느닷없이 보복성 교육 명령을 당한 사태와 관련해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이 심원택 부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들은 폭언 욕설 파문의 당사자로 가해자적인 심원택 부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격을 모독당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과를 요구한 기자들에게 보복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데스크를 맡고 있던 고현승 기자의 후임으로 발령이 난 기자도 이런 상황에서는 직을 맡을 수 없다며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2580 기자들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를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한다.

심원택 부장의 교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난 7월 파업복귀 후 방송정상화를 위해 취재와 제작에 매진하고 있는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에게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금요일(7일) 시사제작2부 소속의 고현승, 김희용 두 기자에 대해 ‘3개월간의 교육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이 난대없이 난 것이다. 이들은 9월 16일 방송되는 시사매거진 2580의 제작을 준비하던 데스크와 기자여서 당장 방송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제작진이 갑작스런 인사조치에 대한 이유를 묻자 심원택 부장은 “이들과 같이 일하기 꺼려로운 점이 있어 김현중 시사제작국장과 백종문 본부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인사조치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당장 일주일 뒤 방송을 앞두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이나 ‘사규위반’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꺼려워 인사를 냈다는 것이다. 어떤 점이 꺼려웠는지 묻자 심 부장은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하기만 했다.

이 부분에서 2580제작진은 부장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알려졌다시피 심 부장은 지난달 안철수 교수에 대한 아이টে임을 두고 ‘기자들이 종북친북파 파이기 때문에 기사 작성은 편향적일 게 뻔하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고 기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때 기자들을 대표해 심 부장에게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한 이들이 바로 고현승, 김희용 두 기자이다. 부당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과실죄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유추가 가능하다. 심원택 부장은 ‘종북친북파파’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기자들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폭언의 가해자는 인사전형을 휘두르고 폭언의 피해자들이 인사 조치로 보복을 당한 형국이다. 당장 이번 주 방송(16일)은 불방 위기에 처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작진은 심원택 부장을 프로그램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측이 강조하는 ‘방송정상화’를 위해 심 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또 심원택 부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지난 ‘종북친북파파’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9월 10일